



노동자
민중당

분회통신_9호 (2018.11.05.)

노동자 직접정치로
세상을 바꾸자



칼럼

양승태 구속과 피해자의 신원복권

-이의엽 민중교육연구소장-

지난 27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임종헌의 구속영장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여러 사안에서 임종헌과 공모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권자가 대법원장이며, 그 자리는 대법관 0순위 보직이다. 대법관 제청권은 대법원장의 소관이고, 대법원장은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제청 권한도 행사한다. 그러니 행정처 차장은 대법원장의 총직인 수족 인 셈이다. 1993년부터 2017년까지 행정처 차장을 지낸 18명 중 16명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됐다. 행정처 차장 출신으로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되지 못한 경우는 양승태가 대법원장 시절에 임명한 임종헌 전 차장 등 2명뿐이다. 만일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지 않았으면 이 둘 역시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 되었을 터다.

임종헌은 수족이고 양승태가 몸통이다. 사법부가 임종헌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어물쩍 봉합하려다간 사법부 전체가 구제불능의 청산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양승태 구속이 사법적폐 청산의 시금석이다.**

범법을 저지른 국회의원들은 사법처리는 물론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는다. 대통령도 국정을 농단하고 불법을 자행하면 사법처리를 피하지 못한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이 구속돼 중형을 언도받았고,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재 구속 수감 상태에 있다. 하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면서 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사법부에게는 더욱 엄정한 기준이 적용돼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가 구속됐는데, 양승태가 버젓이 대로를 활보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신원(伸冤). 사법적폐 피해자들의 가슴에 맞힌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 복권(復權). 사법적폐 피해자들의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줘야 한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주고 양심수가 석방돼야 하며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되어야 한다. **가해자 양승태의 구속 없이 피해자들의 억울한 원한을 풀고 빼앗긴 권리를 되찾는 일은 불가능하다.**

분노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기실 임종헌을 구속시킨 데서도 피해당사자들의 투쟁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지난 10월 20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사법적폐 청산 3차 국민대회’에서 사법적폐의 피해당사자들은 피맺힌 울분을 토로했다. 10월 20일 대회의 함성이 25일 국회의 특별재판부 추진과 27일 법원의 임종헌 구속영장 발부로 이어졌다. 양승태 구속과 범비 탄핵을 위하여 피해당사자들은 더 가열차게 투쟁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서야 할 때다.

분회탐방

서울노동자민중당 학비현장위원회 '강남제비'분회

-분회장 이주니 (구룡중학교 조리실무사)-

우리 강남제비 분회는 '민중의 꿈'에서 시작했습니다. 분회이름을 지을 때 강남지역에서 근무하니까 강남이 들어가되 좋은 의미를 부여하자는 뜻에서, 춤바람 제비가 아니고 '강남 갔던 제비가 북의 씨앗을 물고 온다는 뜻'으로 강남제비로 지었습니다.

분회원은 7명쯤 되지만 꾸준히 분회모임에 함께하는 분은 4명입니다. 아담한 분회이고 강남 각처의 학교에서 교무실무사, 특수실무사, 조리실무사, 과학실무사 등등 다양한 직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제비는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회를 거듭할수록 정치모임과 노조활동을 세상에서 가장 즐거워하고 재밌어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분회입니다.

노조를 알면 알수록 정의로워지고 정의로워질수록 세상을 바꾸기 위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이 온전히 노동자들의 운명과 입장을 함께 할 민중당을 통해서 이루어 질 것을 믿으며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손잡아 줌으로써 성장하고 있습니다.

강남제비가 지금은 작은 씨앗에 불과 하지만 천 배 만 배 성장하는 분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장소식

코카콜라 운송노동자들의 투쟁, 시작과 승리까지 함께한 민중당

-김은정(故 박종태열사 추모사업회 사무국장)-



회사가 보낸 집단해고 문자 한통. 10년 동안 멈춰있던 운송료 인상을 요구한 코카콜라 화물운송 노동자들에 대한 회사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35일간의 투쟁. 그것은 코카콜라 운송노동자들이 인간선언을 한 피눈물 나는 투쟁이었고, 광주지역 노동자와 시민단체의 끈끈한 연대가 넘쳐나는 투쟁이었으며, 출퇴근 교통 불편과 소음을 견디며 지역주민들이 함께한 따뜻한 배려와 응원의 투쟁이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격이라 했지만 35일간의 투쟁을 승리하고 당당하게 전원이 현장에 복귀하였습니다.

광주지역의 당원들은 10년 전 문자 한 통으로 집단 해고된 대한통운 화물노동자들을 기억합니다. 10년 전 상황과 너무나 닮은 코카콜라 투쟁. 한 사람의 노동자도 한 사람의 동지도 다시는 억울하게 잃을 수 없다는 심정, 바뀌지 않은 세상에 대한 분노, 민중당이 더 커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잘못된 법과 제도를 걷어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당원들은 코카콜라 노숙농성장을 투쟁 첫날부터 문턱이 닳도록 찾았습니다.

지나는 길에 들렀다며 묵은지 한 통을 쓱 내밀고 돌아서던 나이 드신 당원, 잘하는 것이 노래밖

에 없다며 악기를 들고 찾아주신 당원, 투쟁은 밥심으로 한다며 쌀가마를 들고 오신 당원. 이런 소소한 방문이 지역위원회 당원 소통방에 올라오면서부터 당원들의 방문과 물품후원은 주방에서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고, 급기야 중고 냉장고까지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처음'한 투쟁. 인간대접 받고 살고 싶어 투쟁을 시작했지만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는 코카콜라 조합원들. 하지만 어머니처럼 오누이처럼 아침저녁으로 살들하게 챙겨주고, 맨 앞자리에 서서 함께 투쟁하는 민중당 당원들을 보면서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한 뜨거운 동질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투표하는 날이면 뒤도 안 보고 찍었던 호남의 당, 그동안 정치는 그들에게 맡겨 두었었는데 이제는 노동자가 직접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민중당 당원이 되셨습니다.

후원물품을 기록해 두었던 수첩이 빼곡하게 찻습니다. 첫 장부터 민중당 당원 이름으로 가득 찼던 수첩이 뒤로 갈수록 민중당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 여쭙봤더니 "이제 민중당은 같은 식구잖아요, 식구끼리는 안 적어도 될 것 같아서."라고 하십니다. '식구' 참 따뜻하고 감사한 이름. 35일간의 투쟁은 그렇게 우리를 민중당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였습니다.



현장소식

노동자민중당 당원들의 사법적폐 청산 실천



‘현장정치실천’, 꾸준히 정기적으로~~~!!!

정책과 논점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 평가

정부가 10월 24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알맹이 빠진 임시방편 일자리 정책

10월 24일 발표된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은 올해 들어서만 발표된 세 번째 일자리 대책이다. 10월 초 부터 김동연 부총리가 직접 ‘현재 일자리가 엄중한 상황이며 관계 장관 회의와 당·정·청 협의를 거쳐 단기적으로는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중기적으로는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보고 있다.’고 예고했지만 발표된 내용은 알맹이 없는 임시방편용 일자리 정책이다.

※ 분야별 주요 일자리 지원 사업

분야	주요사업
㉠ 취업 역량 제고 및 안전·재해예방 등 시급한 공공수요 충족	
- 청년 일경험 축적 (7천 600명)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증원(5천 300명), 정부부처·공공기관 지원인력(2천 300명) 등
- 민간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1만명 확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인원 확대 (1만 명 확대)
- 긴요한 공공수요 대응 (4천명) (사고·재해예방, 안전·시설점검)	제품안전 라돈 측정 서비스 전통시장 화재 감시
㉡ 대국민 서비스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	
- 행정 정보·실태조사, 필수 통계 DB구축 (8천명)	토지이용현황 조사 (드론 활용 등), 공공시설물 내진 설계 전수조사, 국유재산 총 조사 확대 (빅데이터 축적)
- 대국민 서비스 현장인력 확충 (1만 1천명)	
- 전문 인력양성·정책사업 지원	자영업자 상권분석, 스마트 공장 구축·운영지원, 소상공인 제로페이 홍보
- 공공서비스 질제고	산재보험 소규모사업장 가입 지원, 외국인 불법고용방지 집중 계도
㉢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일자리	
- 취약계층 지원 (7천명)	농촌영농·어항·해양 환경 개선 지원
- 위기지역 지원 (1만 1천명)	지역 환경정비, 행정정보 실태조사

필요하면 해당 일자리의 기한을 내년까지 연장할 수도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번 일자리 확대에 추가 자원 투입 없이 이·전용 예산이나 예비비 등 올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길어야 두 달 짜리 ‘초단기 알바’ 일자리라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특히, 공공분야의 단기 일자리 중 제품 안전 라돈 측정 서비스, 전통 시장 화재 감시 등 사고·재해 예방 안전시설 인원은 전문적인 훈련도 필요하고 안전 사회를 위해 지속해서 마련해야 할 일자리인데 단기 일자리로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최악의 고용지표 속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정부의 절박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대책은 일자리 지표를 높이기 위한 나쁜 일자리 창출에 불과하다. **재벌 개혁과 같은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한 근본적 대책 없이 단기 대책만 되풀이하다가는 이전 정부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 우려되는 反노동 행보

정부는 노동시장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방안을 연내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최대 3개월인 탄력 근로 단위시간 확대 등이 그 방안이다. 이는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反노동 행보이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는 이미 지난 3월 주 52시간 상한제 단계적 시행을 결정하고, 7월에는 300인 이상 사업체, 공공기관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위반 시 단속과 처벌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시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탄력근로 단위 기간 확대 등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겠다는 뜻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강력하게 반발하며 전면적 투쟁을 예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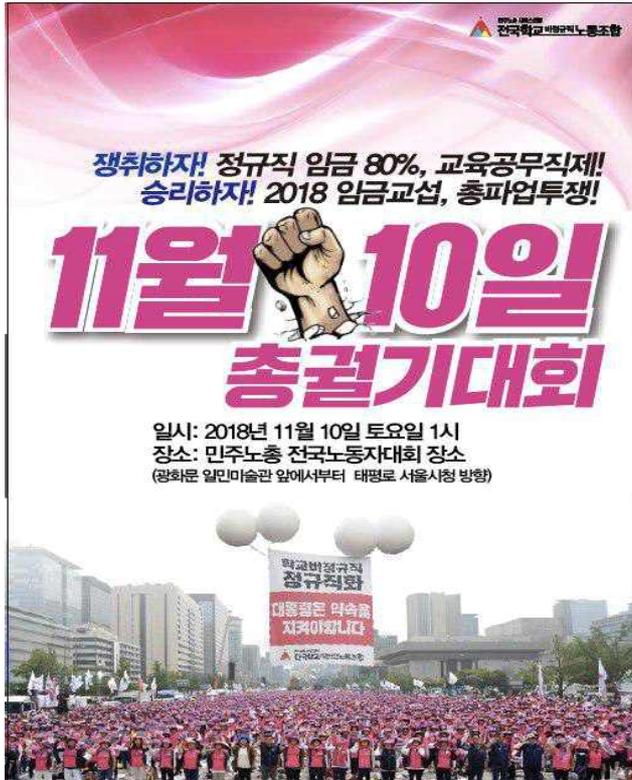
■ 무분별한 규제 완화 중단해야

또한 이번 방안에는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한 혁신성장과 규제 혁신이 담겨있다. △건강관리서비스 및 혁신 의료 기술·제약 활성화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격협진 확대 등을 통해 **新시장 창출 효과가 큰 스마트 헬스 케어 관련 규제부터 풀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기 인공지능과 로봇 등 혁신·첨단 의료기기는 기존 임상 사례가 부족하더라도 별도의 평가를 거쳐 신 의료기술로 인정하고 시장진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무허가 의료 기기 난립, 공공병원 민간 매각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다.

△ 해양·산악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특구 조성은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의 개발로 이어져 난개발을 유도하고 환경파괴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숙박 시설 높이 제한 등 시설 관련 규제 완화 계획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산림 규제 완화 정책과도 비슷하다.

주요일정

11.10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총궐기대회



2018 전국노동자대회



12.8 '양승태 구속, 사법정의 실현! 종전선언 촉구, 한반도 평화정착!' 이석기의원 석방대회

